



## 원안위 비호받는 한국방사선안전재단

사업 성과 대부분이 사업시행주체 출범도 하기 전에 발생  
임직원 19명 규모에 2달간 사업비 집행만 1억 3천만원

□ 민병주 의원(새누리당,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)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‘2012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산검토 보고서 및 방사선안전재단 사업 성과 현황’에 따르면,

- 원안위가 제시한 「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」의 성과인 ‘20건의 다자 및 양자간 협력활동과 TRM 협력각서 및 ToR 개정’ 중 **18건**의 국제협력활동 사업 성과는 실제 사업비 4억원을 전액 출연받은 한국방사선안전재단(설립승인일 2012. 11. 06)의 설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\* <표1. 2012년 한국방사선안전재단 기관현황> 참조

\* <표2. 2012년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 성과 내역> 참조

### <표1. 2012년 한국방사선안전재단 기관현황>

가. 기관명 : 재단법인 한국방사선안전재단

나. **설립승인일** : '12. 11. 6 (법인 등기일 : '12. 11. 9)

다. 설립목적 :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고 관련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을 기획, 관리하여 방사선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, 환경을 최선으로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

라. 대표자 : 최 만 섭(사무총장)

마. 임직원 현황

- 임원(이사 및 감사) : 10명(상근 1명, 비상근 9명)
- 직원 : 18명

\* 자료 : 한국방사선안전재단

<표2. 2012년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 성과 내역>

구분		일정	장소	내용
국제회의	1	3.12~18	미국 NRC	제24차 규제정보회의
	2	3.28~30	IAEA	IAEA 폐기물 공동협약(JC) 의장단 회의
	3	4.16~18	캐나다 CNSC	제30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(INRA)
	4	9.16~20	IAEA	IAEA 제56차 정기총회
	5	9.18	캐나다 대사관저	제31차 INRA 회의
	6	10.18~19	프랑스 OECD/NEA	제125차 OECD/NEA 운영위원회 OECD/NEA 정책토론회
	7	11.29~30	한국 서울	제5차 한중일 TRM 및 제7차 정보교환회의
	8	12.13	일본 후쿠시마	후쿠시마 장관급회의
양자회담	1	1.16	위원회	미국 NRC 위원
	2	2.7	위원회	UAE 아부다비 행정청장
	3	3.5	위원회	주한 프랑스 대사
	4	3.22	위원회	대만 원자력위원회
	5	3.22	위원회	프랑스 ASN 위원
	6	3.26	위원회	이스라엘 원자력위원회 위원장
	7	3.28	위원회	IAEA 사무총장
	8	4.9	PBNC 행사중	US NRC 위원
	9	4.9	PBNC 행사중	프랑스 IRSN 소장 (원자력규제기관)
	10	7.23	위원회	FANR 청장 (UAE 연방원자력안전규제청)
	11	9.3	위원회	OECD/NEA 사무총장
	12	10.15	위원회	주한 파키스탄 대사
TRM		11.29	한국 서울	TRM 협력각서 개정 및 ToR 개정 (제5차 한중일 TRM 및 제7차 정보교환회의 中)

\* 자료 : 원자력안전위원회

○ 2012년 해당 사업의 실집행내역을 보면, 2012 회계연도 기준(2012년 12월 말) 방사선안전재단에서 1억 3천만원(총 사업비의 32.5%) 실 집행되었음.

- 설립 약 2개월 만에 최대 2건의 국제회의 활동으로 19명의 임직원(상근임원 1명, 직원 18명)이 1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셈임.

\* <표3. 2012년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 사업시행주체의 실집행내역> 참조

<표3. 2012년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 사업시행주체의 실집행내역 >

사업비	사업 시행주체	사업 시행방법
4억원	한국방사선안전재단	출연 (100%)
기준	2012년 12월 말 기준	2013년 6월 말 기준
집행내역	* 인건비 4백만원 * 직접비 26백만원 * 일반관리비 100백만원	* 인건비 160백만원 * 직접비 91백만원 * 일반관리비 100백만원
총 계	1억 3천만원 (32.5%)	3억 5천 1백만원 (87.8%)

\* 자료 : 원자력안전위원회

\* 협약에 따른 해당 사업기간이 2012. 11.~2013. 7.이므로 2012년도에 사업비 전액 집행 불가능

- 민병주 의원은 “각종 비리사건으로 얼룩진 원자력의 안전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 관행처럼 이어지는 주먹구구식 사업관리가 국민들의 불신을 부추기는 셈” 이라고 지적하며,
- 또한 “원자력 분야가 갖는 높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욱 엄정한 사업 및 기관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신뢰 확보의 첫 걸음을 떼는 것” 이라고 강조함. /끝/